

〈기여입학제, 이렇게 본다〉

신종 입시투기, 기여금입학제

이 재 운

중앙대 무역학과 교수



1

일 부 사립대학 재단 및 일부 총장들은 지난 7년간 집요하게 대학 기여금입학제를 추진하도록 정부, 국회, 언론계에 촉구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71조 ②항을 개정하여 대학입학 업무를 대학에 맡긴다는 포장 속에 기여금입학제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자율권 자체는 좋은 생각이지만, 기여금입학제는 이 자율권 속에 절대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것은 포함될 수 없도록 단단히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93년 여러 대학의 입시부정을 위시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학의 변칙 운영 행

태가 만천하에 날날이 드러남에 따라 온 국민은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국회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밝혀진 바로는 지난 '88년 이후 '91년까지 전국 49개 대학의 부정입학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니 이 나라 대학교육의 도덕성이 절망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절망적 대입 부정의 치료 처방에 관한 정부와 사립대학 재단 이사장 및 총장 중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 방법과 정책 의지에 내포된 가치 불감증과 도덕 불감증은 위협적인 것이다. '93년 2월 9일 151개 대학 총장들이 모이고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모임에서 교육부장관은 '94학년도 신입생 선발시기인

가을부터 대학 기여입학제를 학사관리상 우수한 대학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겠다고 언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151개 대학 총장 중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과거 오랜동안 구조적 먹이사슬이 관행화 되어 대학의 책임있는 자리의 총장 및 교무위원, 직원,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사 및 일반인 브로커 등이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입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같은 범죄행위로써 사학재단에 막대한 자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자들도 개인적 처부를 하였다.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신의 부패에 있으며, 그동안 도덕과 창조에 기초한 교육혁신의 부단한 정책 결단을 게을리 해 온 정부와 대학과 교육계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학의 재정난이 가장 주된 원인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틀린 발상은 대학의 재정난을 기여입학제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말이 기여입학제이지 이 기여에는 재정난 해결을 도모하려는 기부금, 즉 돈 입학제가 그 주된 관심사이다. 이것은 반교육적인 것이며 우리 헌법 31조 ①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학 재정난은 가장 교육적이며 합헌적 방안을 가지고 정부와 대학과 교육계 그리고 산업계와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2

교육과 학문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정진하는 선비정신으로 해 가는 것이며, 돈은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이다. 대학입학 기회는 본인의 자질과 노력의 과정을 거친 결과를 평가하여 주어져야지 돈으로 사는 대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대학 합격증을 5년 내지 10년 선불로 파는 돈으로써 재정난의 일부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육 기회균등과 도덕성이 훼손 당한다면 뽕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고마는 우를 범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이 제도가 완전무결하게 운영된다 해도 아래에 열거하는 폐단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첫째,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헌법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본인의 지적·신체적·인격적 능력을 일컬음이며 그 이외의 제3의 재력이나 권력 혹은 가정의 사회적 신분을 지칭함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권리라 함은 생존권적 자유권을 말함이다. 기여입학제 주장자들은 상품시장 기구를 운영하는 요체인 금전적 가격원리를 본인의 능력만이 요체인 교육시장 기구에 억지로 대입시키려는 물가치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둘째,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써, 정부 및 사회각계 요직에 있는 자는 권력으로써 그 자녀들의 입학 허가를 요청할 때, 사립대학은 이들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기여금입학제는 이 계층에 대한 특혜로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지금과 같이 교육 기회균등과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아래에서도 학부모들이 신경과민증에 가까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 돈을 내고 자녀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여금 마련을 하려 할 것이고, 이것

을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부모로서의 열등감과 자기비하를 하게 될 터이니 이 자체가 가정교육을 해치는 반교육적인 것이다. 또한 자칫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반목이 생길 것이다.

넷째, 십대 청소년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오늘도 이 나라 십대 남녀 청소년들은 새벽이면 별을 보고 집을 나서고 밤이면 자정이 넘도록 도서관에서 입시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재수·삼수·사수하는 학생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공부가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는 오직 본인의 피나는 노력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는 교육 기회균등의 정신과 살아있는 대학입시 기강이 뒷받침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여금입학제가 정당하게 시행된다 해도 이들 수백만 어린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더구나 그동안 외형적 성장 정책 아래 개발이익의 일그러진 분배과정에서 파생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상존하고 있으며 온갖 투기 병폐를 보아온 지금, 또 다시 대학입시 투기까지 정부가 주도 조장하여 모험심이 강하고 예민한 십대 청소년들이 자기들 가슴에 상처를 준 바로 이 기여금 마련을 위하여 돈을 사냥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같은 상황은 생각만 해도 대단히 무서운 일이다. 또한 이에 관련된 사회비용 부담은 막대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교수는 각 학과별로 입학생 사정 절차에 불가피하게 가담하게 되어 기여금 입학의 몰가치와 부조리를 추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인격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의 강단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대학의 일부 교수나 직원 혹은 동창회원 일부가 기여금 입학자를 소개하는

중개인이 될 것이고 그 경로가 비공식적으로 구축·운영되어 그에 따른 응분의 수수료가 거래될 터인즉 전인격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설 자리는 없게 될 것이다. 흔히 기여금 입학제 주창자들은 미국의 경우나 일본의 예를 들지만 이것은 전혀 부당한 비교이다. 미국에는 대학은 너무 많고 입학생은 너무 모자라는 현실이다. 매년 80만 명이 대학입시를 치르고 그 중 약 40만 명만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 40만 명이 낙방하고 있으며, 그 중 30만 명 정도는 거리의 재수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몇몇 의과대학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기여금 입학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폐단이 많아서 요사이 정부와 의과대학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입학이 사회적 신분상승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본인의 지적·신체적·인격적 능력과 관계없는 부모의 돈이나 권력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제도화하는 결과가 되어 봉건시대 신분 세습제를 방불케 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기여금입학제 실시로 인한 폐단이 크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내에 이를 자율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다. 지난 '91년에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5공 때 시행되던 사립학교법보다도 훨씬 더 반민주적 요소가 강화된 바, 이에 대하여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가 교수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지속적 반대를 하면서 민주적으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

교법에 의하면 대학의 인사와 예산 운영의 모든 권한이 재단 이사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총장에게는 단지 제청권만이 있는 실정이다. 금년 봄에 표출된 여러 사립대 재단 이사장들의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부정, 비리, 독선 등 범죄사건들도 생명을 걸다시피 고발한 교수들에 의해서만 문제 제기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현행 사립학교법상 재단 이사장을 감시·통제할 기능이 학교 내에는 물론 없고, 밖에 교육부에는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고 대학 운영의 자율통제 기능을 살리는 방법은 교수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심사의결 권한을 줌으로써 재단 이사장의 부정과 독선을 사전에 견제하고, 재단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분별없이 등조만 하는 총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행 사립학교법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사립대학에 돈입학제인 기여금 입학제를 허용한다는 논의 자체도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면 이같은 폐단이 많은 기여금 입학제, 즉 돈입학제이며 신중 입시 투기인이 제도를 절대 반대하면서 가장 교육적이며 헌법 31조 정신에 부합되는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육시설 투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의 면제로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보조금을 현재 사립대학 재정 규모의 단 1% 수준에서 20%로 늘리면 연

간 약 6천억 원의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초·중등 교육 및 국·공립대학 재정도 현재 약 10조 원보다 매년 20%씩 늘려가면 2조 원의 증대 효과가 생긴다. 2조 6천억 원씩 매년 추가로 투자하면 1998년에 가서 공교육 투자가 총 20조 원, 즉 GNP의 5%가 되어 비로소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다. 이의 재원 조달은 현행 교육세를 제대로 쓰는 것은 물론 모자라는 것은 부동산 및 재산세에 확대 적용하면 조세 저항도 없이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부동산을 위시한 재산세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총 가치 약 2,600조 원의 65%를 상위 5%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5% 부유층에게 교육세를 누진세율로 부담시키면 넉넉한 교육세 재원이 조달될 것이다.

셋째,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개발 통합체제 운영에 의하여 산업계 연구개발비의 20%를 대학이 담당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연간 약 1조 원의 연구비가 추가로 대학에 조달될 것이다.

넷째, 대학이 현재는 오후 6시만 되면 막대한 시설이 휴면상태가 되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완전 휴면상태가 되는데, 만약 대학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일제로 주간·야간을 통틀어 운영하면 현재 정원보다 약 50% 이상 증원할 수 있게 되어 학생 등록금 수입 증가분이 신규 교수채용 및 추가예산 지출 후에도 약 1조 3천억 원의 순증액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거리의 재수생을 줄일 수 있는 교육기회 확대도 기할 수 있다.

다섯째, 조건 없는 순수한 기부금이 대학

으로 올 때 혜택을 지금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해야 한다. 예컨대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에 투자 혹은 기부하는 경우에 세제상 유리한 혜택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학재단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활용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함으로써 대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는 물론 외부자들에게도 신뢰 관계를 두텁게 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위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정성껏 추진한다면 현재 사립 및 국·공립대학 총 재정 규모 3조 8천억 원이 8조 원으로 증대될 것이며, 순수한 증대금액만도 4조 2천억 원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내부혁신을 이룩하여 참여체제로서 창조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다분야 종합연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가경쟁 우위전략의 제일 우선순위를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에 두고 새로운 교육비전과 투자증대 그리고 연간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 교육혁명의 결단을 해야 하며, 산업계도 교육의 수혜자로서 대학교육과 연구에 우선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정치 시대에 걸맞게 국민적 결단으로 기여금 입학제를 절대 반대하고, 교육적이며 합헌적 방법으로 교육투자 증대를 성취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이재운/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트포드 대학에서 경영학·경제학 석사,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KIST 기술경영연구실장 겸 기획과 리실장 등을 거쳐 현재는 중앙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앙대 교수협의회 회장,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과학기술정책분과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기술경영의 학문적 영역과 학제적 연구 발전",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의 성과 분석과 육성 방안", "기여금입학제 반대 및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국방 R&D와 민간 R&D의 연계 강화 방안"의 다수를 발표했다.